

식량자급률 55.5% 목표... 농어촌공, 사업 틀 확 바꾼다

곡물 수출국 '식량 무기화' 대응
논·밭 겸용 범용농지 개발 바탕
전략작물 생산 늘려 자급률 견인
ICT·점막 용수공급 안정화 박차
유휴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농어촌 에너지 자립 지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미래 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위기 등을 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저밀도·친환경 공간에 대한 가치가 급부상하며 농어촌 환경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1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기존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며 해외농업,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의 전략과제도 지난해부터 새롭게 설정했다.

■ 식량주권 튼튼하게...기반 강화 과제로

정부의 2027년까지 55.5%의 식량자급률 목표도 두고 있다. 2021년 기준 44.4%에 머물렀던 자급률을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식량 무기화' 경향에 대응하는 취지다.

농어촌공사는 논 중심의 농지 개발에서 밭이나 논·밭 겸용 범용농지 개발을 통해 농업생산기반 조성 방향을 기존의 쌀 재배 중심에서 밭, 콩 등 식량작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 재배 단지 배수개선 사업, 논·밭 겸용 용수개발, 간척지 개발 등을 확대해 나간 계획이다.

해외 식량 공급망도 확대한다. 농산업 진출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했고, 아프리카에 다수확 벼 종자와 생산체계를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K-Ricebelt)' 사업 구축 등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을 연계한 융복합 ODA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공사의 사내벤처인 'K-Agro'에서는 민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통한 식량안



농어촌공사 진영

농어촌공사 제2공

보 강화를 위해 민·관·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해외농업투자플랫폼을 만들고, 농업 분야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수자원 관리 강화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 용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재해를 비롯해 농어촌의 물수요와 수급 상황은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다. 농어촌공사는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기존의 불관리를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스마트 물관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물 사용량 절감과 물 이용의 편의성 증

진을 위해 시설물 데이터화, 원격 자동화 등으로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용수 공급 측면에서도 공사 관리 저수지에 재해예방계측기, 스마트 예·경보기, 원격제어 설비 등 ICT 기반 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 보유 시설물과 유휴부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해 농어촌 탄소 감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사 사내벤처인 '어벤처스'에서는 유휴부지나 스마트팜 주변 부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농어촌의 에너지 자립을 돕는다. 열원 임대 등 발전 수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지플랫폼 구축...농어촌 공간 활력↑

지난해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조사부터 분석·공유를 비롯해 거래까지 포괄하는 고객중심의 '농지 플랫폼'이다. 국정과제인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플랫폼 내 고령농·이농 및 은퇴농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규도입한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농지 매입을 조건으로 최대 30년 동안 연 1%의 저리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농의 농지 확보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채, 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다.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청년농의 유입이 확대되며 농촌 재생과 생활권 활성화에도 활기가 들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사·군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공사가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운영 중이다. 농어촌공사의 농촌재생 프로젝트의 장기 목표는 생활인프라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유해시설 철거 등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이다.

농어촌공사의 전략과제 수립을 주관하고 있는 강경학 부사장은 "앞으로도 농어촌의 당면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농어촌을 미래성장 능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사업의 패러다임을 내실있게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공사 추진사업의 다각화와 핵심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